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일반 논문

4.16교실 존치 투쟁과 새로운 장소성의 생성

피해자성의 기억론을 넘어 인격성의 기억론을 향하여

이현정 _서울대학교 교수

논문 요약

이 논문은 세월호 참사 이후 4.16교실 존치 투쟁의 배경과 그 과정의 역동을 살펴봄으로써, 교실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의미의 경합과 기억론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11월경부터 유가족과 단원고 학교 측은 희생 학생들이 사용했던 당시 2학년 교실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해왔으며, 2015년 여름부터는 일부 재학생 학부모들이 교실 철거를 요청함에 따라 갈등은 점차 격심해지고 다각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경기도교육청은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 2016년 3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중재 명목으로 교실을 안산교육지원청별관으로 옮기는 합의를 이루어내었다. 4.16교실 존치 투쟁의 과정은 학교 교실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 간의 의미경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관여하는 '진보적' 실천이 어떻게 특수한 방식으로 정치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언론 보도 속에서 교실 존치 투쟁은 '존치'와 '철거'라는 두 가지 대립각 속에서 논쟁이 나타났지만,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5년 동안 현장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교실 존치를 둘러싼 갈등은 이분법적인 담론적 프레임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DOI: http://dx.doi.org/10.31008/MV.41.4

이 논문에서는 현장에서의 참여관찰과 면담 및 출간된 구술기록에 근거하여,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유가족 등 현장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 역학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단원고 2학년 교실이 장소성을 삭제당한 채 '4.16기억교실'로 자리 잡게 되는 정치적 과정과 그 성격에 대해 분석해볼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4.16기억교실의 향방 및 장소성의 새로운 생성과 관련된 전망에 대해 제언할 것이다.

■ **주요어:** 4.16기억교실, 세월호 참사, 4.16기억저장소, 인격성의 기억론, 장소성

1. 머리말

2016년 8월 20일, 정오를 넘긴 대낮이었다. 단원고 1층 건물 밖 로비에는 2014년 참사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유품을 담은 상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나란히 놓인 상자를 둘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시민들이 서 있었다.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듯 일촉즉발(一觸卽發)의 긴장감이 침묵 속에 흐르는 가운데, "아이를 빼앗아가고 이제 교실까지 내주어야 하느냐!"는 누군가의 오열이 적막 속에 솟구쳐 나왔다. 한 번도 국가와의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교실은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다. 참사 후 858일 만이었다. 이제 곧 유가족은 설령 내키지 않더라도 흰 모자와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의 도움 속에 아이들의 유품 상자와 책걸상을 하나씩 안산교육지청 별관 건물로 옮길 것이다. 별관 건물로 옮기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몇몇 부모들은 이미 집으로 유품 상자를 가져간 뒤였고, 미수습 학생 4명과 유가족 3명은 책걸상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학교에 놔두기로 했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아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저항과 분노의 몸짓이었다.[1)]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채 반년이 지나기 전부터 단원고 유가족과 학교 측은 희생 학생들이 사용했던 당시 2학년 교실의 존치 여부 문제로 날카로운 대립을 해왔다. 유가족은 2학년 교실 10개를 그대로 보존하여 참사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단원고와 재학생 학부모는 2014년 가을부터 '재학생 교육공간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며 2학년 교실을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2016년 3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중재 결과, 양측은 교실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신축 장소가 마련될 때까지 안산교육지원청별관으로의 '교실 임시 이전'을 합의하였다. '중재'라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유가족에게 교실 포기를 설득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과연 교실 철거를 주장해 온 단원고나 중재해온 경기도교육청은 진정 '재학생의 교육공간 부족' 때문에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다시 말해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은 현재의 단원고 교실이 아니었다면, 유가족이 주장해 온 교실 보존의 사회적·교육적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었을까? 2016년 8월 20일, 단원고, 경기도교육청,

1) 2016년 8월 20일 연구자의 참여관찰 기록 중 일부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진 교실 정리 '행사'에는 무려 8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안산교육지청별관으로의 이전 이후 교실 복원이나 재현을 위한 예산은 왜 단 1원도 할당되지 않았던 것일까?

이러한 진행 과정은 '교실'에 대한 학교, 교육청, 한국 사회의 태도를 포함한 중요한 사회문화적인 질문을 함축하고 있다. 어째서 한국 사회에서는 '교실은 재학생들의 것'이라는 담론이 당연하게 혹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일까? 또, 학교 교실의 처리 문제는 단원고와 관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수학여행을 갔던 학생들에 대한 명예 졸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 시민들의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는 교실을 이처럼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과연 참사 이후의 바람직한 대응방식이었을까? 어째서 한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사고의 뒤처리를 마치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을까? 이러한 숱한 질문들 속에서, 이 논문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단원고 2학년 교실 존치 투쟁의 배경과 그 과정의 역동을 살펴봄으로써, 교실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의미의 경합과 기억론적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단원고 2학년 교실의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관여하는 '진보적' 실천이 어떻게 특수한 방식으로 정치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언론에서 보도해왔던 바처럼, 교실 존치 투쟁은 담론적으로 '존치'와 '철거'라는 두 가지 대립각 속에서 논쟁이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이분법적 담론의 구분 속에서, 우리는 교실 존치 문제를 둘러싼 세력이 선명하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장에서 관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한 바에 따르면, 교실 존치를 둘러싼 갈등은 이분법적인 담론적 프레임보다 더 복잡한 다각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유가족 등등—유가족도 재학생 동생을 둔 부모와 아닌 부모의 경우에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현장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 역학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단원고 2학년 교실이 '4.16 기억교실'로 자리 잡게 되는 정치적 과정과 그 성격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기억의 문제를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맨 처음 보았던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 1997)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은 그것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든 혹은 사물과 관련된 것이든 늘 집단적이다. 기억이란 현재를 살아가는 개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과 함께 공유하는 과거 시점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현재에서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처럼 '기념하기 위한 기억'은 기억의 여러 형태 중 가장 조직화되고 집단화된 기억이며, 이러한 집단기억이 계속해서 기억으로 남아 의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매체로 재현되는 것이 필요하다(태지호 2014). 인간 기억력의 한계(일반적으로 3-4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후속 세대로 전승되는 '문화적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발생한 사건을 그 후속 세대가 인지할 수 있는 기념공간이나 조형물과 같은 유형유산과, 글이나 그림, 영상 혹은 예술이나 공연의 기록물과 같은 물질적인 매체가 필요한 것이다(아스만 2018).[2] 그런 의미에서, 단원고 2

2) 아스만은 기억을 사회적 형태로서 '소통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소통적 기억은 사건을 경험한 세대와 그 세대를 알고 있는 후대가 공유하는 인식으로, 길어야 80-100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

학년 교실은 참사와 아이들 하나하나를 집단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가장 강렬한 물질적 매체였다.

관람자들은 매체로서의 기념공간에 존재하는 집단기억의 재현물을 체험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의미를 생성해나간다. 즉, 기억의 재구성 매체로서의 공간은 재현 체험을 통해 생성되는 관람자들의 기억을 다시 공간 안에 남기고 새로운 집단기억을 구성해낸다는 점에서 관계생성적이다. 따라서 기념공간은 단순히 유물의 보존이나 전시를 주로 하는 박물관의 개념에서 벗어나 관람자들에게 기념대상에 대한 추모와 공감을 끌어낼 때 진정한 기억의 공간이 될 수 있다(서희정·이재규 2017).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이전되기 이전의 단원고 2학년 교실 역시 이러한 관계생성적 성격의 공간으로서 참사의 집단기억을 형성해가는 곳이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크고 작은 사회적 참사가 숱하게 발생하였지만, 그 참사들은 신문기사와 방송뉴스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로 남을 뿐, 고통에 대한 기억과 그러한 기억의 집단적 공유, 그리고 사회적 의미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치유의 공간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심영섭 2018). 그 까닭은 트라우마적 장소가 가질 수 있는 다층적 의미와 복합성 때문이기도 하지만(아스만 2018, 455),[3] 한국 사회에서는 "무엇을 기억/망

조상에 대한 제사를 4대까지 지내고 이후에 시제로 변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문화적 기억은 인간 기억력의 한계를 넘어 오랫동안 후속 세대에 전승되는 기억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적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유형 유산이나 기록물과 같은 매체가 필요하다(아스만 2018; 심영섭 2018).

3) 예컨대, 아스만은 아우슈비츠에 대해서도 자신의 나라에서 강제수용소를 관리하고 민족적 희생사의 중심적 기억 장소로 만든 폴란드인과 그 장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집단 간의 정치적 알력과 투쟁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기억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참사의 기억은 하루빨리 잊혀야 하며 일상으로 돌아가 참사의 교훈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관념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다. 삼풍백화점 참사 때도 희생자의 위령탑을 참사가 일어난 공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양재 시민의 숲'에 설치함으로써, 기억이 맥락으로부터 탈피되고 의미의 왜곡이 발생하거나 아예 사회적으로 잊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처럼 맥락이 닿지 않는 공간으로의 기념공간의 이동은 기억을 왜곡시키고 피해자와의 공감을 어렵게 하며 치유 공간으로서 역할하지 못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이 논문은 단원고 2학년 교실의 존치를 둘러싼 움직임이 장소성의 보존과 삭제를 둘러싼 집단 간의 의미경합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장기간의 참여관찰과 면담 및 출간된 구술기록에 근거하여, 이 논문에서는 단원고 2학년 교실이 장소성을 삭제당한 채 '4.16기억교실'로 자리 잡게 되는 정치적 과정과 그 함의를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유가족 등 현장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 역학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4.16기억교실의 향방 및 장소성의 새로운 생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해볼 것이다.

독일인과 독일의 후손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2. 교실의 장소성을 둘러싼 의미경합의 시작

세월호 참사 직후, 단원고 1, 3학년 학생들은 교실 칠판에 “꼭 돌아오기. 죽지 말기”, “진용이 짱♡ 기다릴게”, “민혜가 걱정한다. 우소영 어딨니”, “우진 인규 태민 민찬 종범 보고 싶다” 등등, 아이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적어 생환을 기도하였다. 마찬가지로 가족과 다른 학교의 친구들도 간절한 바람이 적힌 편지글, 그림, 만화, 메모 가득한 노란 포스트잇을 통해, 배에서 나오지 못한 아이들 하나하나를 호명하였다. 언론을 통해 이러한 광경이 보도되면서 국내외의 시민들은 때로는 촛불을 들고, 때로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참사 일반이 아니라 세월호에 탔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경험을 하였다. 타인의 자식을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 바라보며 그의 삶과 상실의 고통을 기억하는 한국인의 경험은, 사회적 애도와 기억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 진지하게 논의할 지점을 제공한다. 가족이나 지인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개별적 인격 간의 관계로 깊이 공감하는 현상은 삶과 죽음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 인식의 차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사는 그 자체로 인간 사회의 비극이다. 그러나 250명 학생을 비롯한 304명 희생자의 죽음을 일으킨 세월호 사건은 숫자로 환원된 담론과 개념으로서의 ‘참사’를 넘어선다. 따라서 참사를 사회의 비극적 사건으로 전체로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고통과 살아 있을 때의 삶의 궤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애도와 기억의 성격을 달리한다. 전자를 ‘피해자성의 기억론’이라면 후자를 ‘인격성의 기억론’, 전자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담론적 애도’라 한다면 후자를 ‘관계생성적 애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차원의 다른 애도와 기억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는 애도와 기억의 문제를 다룰 때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원고 1, 3학년 학생들로 촉발된 인격성의 기억론에 기반한 관계생성적 애도는 일부 언론과 시민활동가 및 유가족의 노력 속에 점차 확산해 나갔다. 참사 직후 한겨레 신문에 박재동 화백이 그린 아이들 하나하나의 얼굴과 그 삶을 되새긴 연재 기사는 인격성의 기억론을 실천한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4.16기억저장소는 참사 1주기를 맞아 2015년 4월 2일부터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일상을 상기케 하는 기억의 소환 행위로서 ‘아이들의 방’ 전시를 안산 단원구에 위치한 4.16기억전시관에서 열었다. ‘아이들의 방’은 개별 인격체가 ‘학생’이라는 동일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서로 다른 고유한 일상과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월호 침몰과 구조의 실패가 그들의 소중한 꿈과 삶의 애착에 대한 폭력적 삭제를 강요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전시는 서울의 ‘류가현 전시관’과 제주 ‘기억전시관 리본’ 등 전국 순회 전시로 이어졌으며, 4월 15일부터는 오마이뉴스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아이들 각자의 방, 유품들, 사진과 일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 전시는 인격성의 기억론을 실천함과 동시에 관계생성적 애도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지난 수십 년 숱한 재난과 참사가 있었지만,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는 애도와 기억의 사회적 실천은 이전에는 그다지 존재하지 않은 방식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천의 정점은 4.16기억저장소에서 운영한 ‘기억과 약속의 길’이었다. 2015년 2월부터 안산 지역활동가

김종천의 시도로 시작된 '기억과 약속의 길'은, 4.16기억전시관에서 출발하여 단원고 교실을 거쳐 정부합동분향소로 이어지는, 전국에서 모인 자발적인 시민들에 의한 애도의 순례길이었다. 특히 단원고 교실에서 참여한 시민들은 각 반을 방문하여 교실에 남겨진 아이들의 흔적과 시민들의 소망과 애도를 담은 메모와 방명록을 공유하면서 인격성의 기억론을 체화하고 축적해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6년 한 명 한 명 희생 학생의 삶에 대한 축약된 전기(傳記)인 작가들의 약전(略傳) 집필과 2017년 각 학생에 대한 시인들의 기억 육필시(肉筆詩) 전국 순회 전시로 이어졌다.

앞서 '기억과 약속의 길'에서 한 명 한 명 학생들의 삶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데 교실에서의 경험이 핵심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어째서 인격성의 기억론을 실천하는 데 '교실'이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을까? '교실'은 무슨 까닭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실천에서 특별한 '장소성'을 부여받게 된 것일까?

희생 학생의 친구들은 그가 좋아했던 과자, 소품들을 각자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나누었던 약속과 하고 싶은 말들을 편지와 포스트잇으로 작성하여 책상 위에 빼곡하게 올려두었다. 또 단원고 1, 3학년 학생들은 선후배를 기리며 2학년 교실을 팀을 짜서 청소하였다. 그들은 개별 인격으로써 하늘로 간 아이들을 기억했고, 상실의 아픔을 관계생성적 애도의 실천으로 하나씩 극복해가려고 애썼다. 안산 화랑유원지의 정부합동분향소가 아이의 명복을 비는 상징의 장소였다면, 교실은 아이들의 삶의 실재를 상기하고 소환함으로써 상실의 고통을 애도로 승화시켜가는 장소였다. 그렇기에 유가족 대부분은 화장터에 가기 전 아이의 노제(路祭) 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단원고 교실을 돌았다. 이곳은 사랑하는 아이에 대한 기억과 애도가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자, 아이가 생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꿈을 키우던 장소였다. 단원고는 아이들을 살려서 데려오지 못한 무책임한 원망의 기관이었지만, 동시에 그 또래의 아이에게 가장 특별하고도 주된 삶의 장소였음을 유가족은 공감하였다. 그렇기에 노제에서 학교를 돌며 생존 당시 아이에게 의미 있었던 그 장소성을 재확인하는 연행을 수행했다. 장례를 치른 뒤에도 유가족은 생동하는 아이의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자주 교실에 들르곤 했다. 유가족에게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재잘거림이 떠오른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교실이 갖고 있었던 고유한 장소성을 드러낸다.

> '교실' 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니, 교육보다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교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애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재잘거림, 말소리, 요거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4]

그렇다면, 단원고 학교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단원고는 초기부터 유가족, 학생, 시민들과는 다른 입장 속에서 교실 문제에 대응하였다.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 단원고는 교실을 자물쇠로 굳게 닫았으며, 장례를 치르기 위해 유가족 다수가 학교를 찾아오자 비로소 교실 문을 다시 열

4) 4.16기억저장소 소장 도언엄마 이지성, 2019년 9월 19일 면담 내용 일부이다.

기 시작했다.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단원고는 교실에 와서 아이들을 애도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을 꺼렸고 그 물결을 최소화했다. 단원고는 수학여행을 떠날 당시 아이들이 남겨둔 물건의 배치 방식을 흐트러뜨렸으며, 아이들의 물건을 거칠게 한쪽 구석에 정리해버렸다. 단원고 측에게 참사는 '정상 교육'을 위해 '하루빨리 정리되어야 할 것'에 불과했다. 단원고는 참사의 흔적을 정리하고 재빨리 '참사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각종 행정적 절차를 서둘렀다. 수학여행 답사를 다녀온 교사를 비롯하여 수학여행의 준비에 참여했던 행정실 직원들은 급히 다른 학교로 전출시켰다. 이러한 학교의 행정적 대응은 결과적으로 애도의 장소로서의 교실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지만, 단원고는 애도의 장소로서 교실의 장소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신속한 행정적 집행을 통해 참사와의 연관성 및 희생학생과 관련된 기억을 삭제하고자 노력하였다.

> 교실 문제로 5월 달에 저희가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 그리고 학교의 분위기[에]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흔적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것에 경악을 했고, 그 전에도 교사들의 태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노란 리본을 한 명도 붙이고 다니지 않더라",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이 들었죠. 사실, 문제의 시발점인데 교육청이…. 배를 타고 가는 수학여행을 권유했던 것도 교육청이고, 제가 참사 초기에 처음에 활동을 막 하지 않을 때는 뭘 했냐면, 책을 미친 듯이 읽었거든요, 이 책 저 책을. 배하고 관련된 책이나 세월호 관련된 책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 나오면…. 그때 제일 처음에 읽은 책이 『내릴 수 없는 배』였어요. 그걸 보고 좀 충격을…. 저자도 너무 미웠고, 지식인들의 침묵이 이 문제를 키웠구나. 그리고 교육청이 공범이자 주범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4.16 기억저장소 편 2019c, 150).[5]

2014년 6월 18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산하에 단원고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성)를 구성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8월 1일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설치하였는데, 단원고의 행정적 대응에 아쉬움을 느껴왔던 유가족들은 교육청의 특위와 지원단이 단원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주리라고 기대하였다. 회복지원단이 가동되면서 단원고 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연말까지 몇 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 회의에는 유가족, 생존자 가족, 재학생 부모, 단원고,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때 이미 유가족들은 교실 존치의 입장을 지니고 있었으며, 단원고와 재학생 부모들은 조기 정리의 입장, 그리고 교육청 회복지원단은 양측의 입장에 관해 미온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2014년 11월 24일, 단원고 1, 3학년 학부모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내년[2015년] 신학기에 2학년 교실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유가족들은 11월 30일 가족총회를 통해 "현 상태로 2학년 교실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하였다. 유가족과 재학생 부모

5) 박은희, 2019년 2월 30일 구술 내용이다.

와의 갈등에 직면하여, 이재정 교육감은 12월 1일 오전 도교육청 주간업무보고 회의에서 "[희생 학생들에게] 명예 졸업장을 주는 것이 옳은데 교실을 없애놓고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2016년 1월 명예 졸업까지는 교실을 유지할 것을 표명하였다(한겨레 2014/12/1). 이와 동시에 교육감은 명예 졸업 이후에는 교실을 철거하는 대신 다목적 체육관을 단원고 옆 부지에 건립하여 그곳에 추모관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2014년에 이미 교실을 둘러싼 기억과 애도에 관한 입장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대립과 길항의 불씨를 배태하고 있었다. 간단히 각 입장을 요약하자면, 단원고의 경우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기억을 삭제하고, 마치 참사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것처럼 학교를 입시교육의 장소로 '원상 복귀'시키고자 하였다. 또, 일부 재학생 학부모들은 '학습권 보장'을 명분으로 교실을 서둘러 철거하고 2학년 학생들에 대한 기억을 학교로부터 삭제하고자 하였다. 특히 재학생 학부모에게 2학년 학생에 대한 기억은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불길한 것'이라는 의미조차 지니고 있었다. 유가족 다수의 기억에 따르면, 재학생 학부모는 당시에 "귀신이 나오는 학교에서 우리 자식들을 공부시킬 수 없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단원고나 재학생 학부모 집단과는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참사의 비극과 2학년 학생들이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라는 것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추모관 건립의 구상에서부터 예견되었듯이, 교육청은 어디까지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서 뭉뚱그려지는 피해자성의 기억론과 비극적 사건에 대한 담론적 애도의 틀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유가족과 전국의 시민들이 이미 추구하고 실천해오고 있던, 한 명 한 명 학생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의 삶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인격성의 기억론과 관계생성적 애도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었다.[6]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 1월 명예 졸업까지는 교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에, 2014년 11월부터 한동안은 각 집단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불거지지 않은 채 잠잠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또한, 유가족의 경우 2015년 1월 말부터 2월까지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도보 행진을 수행했고, 4월 1주기 즈음부터는 특조위 시행령 문제 등으로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의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실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유가족이 교실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던 동안에도, 시민들은 피해자성의 기억론과 담론적 애도에 그치지 않고 인격성의 기억론에 바탕을 둔 관계생성적 애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16기억저장소의 김종천 국장은 유가족의 협조를 얻어 2015년 2월부터 '기억과 약속의 길'을 진행하면서 매회 단원고 2학년 교실들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개별 인격으로서의 아이들의 삶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2016년 초까지 약 1년에 걸친 기간에 '기억과 약속의 길'에 참여한 시민들은 무려 3,000여

6) 물론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도 피해자성의 기억론과 담론적 애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들은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를 일반화하는 기억과 애도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개별 인격에 대한 기억과 관계생성적 애도를 추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기억론과 애도의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의 시민사회세력들은 그 지점에 대해 충분히 주목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명에 이르렀다. 또한, 2015년 8월 28일, 단원고에서는 작가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304 낭독회'가 열리고 도종환 시인이 시 '화인(火印)'을 발표하는 등, 기억과 추모의 행위를 이어갔다. 특히 그날 낭독회에 참석했던 소설가 김탁환은 "어떤 공간을 지킬 것인가 없앨 것인가 하는 것은 그곳에 머문 이들의 삶을 기억할 것인가 잊을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아무리 뛰어난 비유나 상징을 동원한 추모 공간도 생생한 교실에 미치지 못한다. 학생들을 존중하고 그 삶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면 이 유일무이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발언하였다(프레시안 2015/8/2). 이처럼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생기있던 삶과 끔찍한 참사의 비극을 기억하고 추모하려는 시도는 유가족이 교실 문제에 잠시 거리를 두는 동안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계속되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3월 참사 1주기를 준비하며 '4.16단원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책자를 발행하며, 단원고 기록물 영상과 온라인 추모관 제작 등을 추진하였다. 추모관 계획은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서둘러 지우려는 (예컨대, 단원고나 재학생 학부모의) 움직임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희생자 개개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려는 관계생성적 애도와는 구별되는 담론적 애도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즉, 추모관을 통해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을 기억하고 교육혁신이라는 새로운 '진보 담론'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실의 책걸상과 아이들의 유품들, 그리고 친구들, 가족들, 시민들이 가져다 놓거나 써놓은 애도의 표현들은 모두 수납하여 정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각각의 개별 인격은 애도나 기억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기억론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유가족의 인격성의 기억론과는 구별되는 피해자성의 기억론이었다. 사실 이러한 피해자성의 기억론과 진보 담론을 새롭게 세우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담론적 애도는 그간 우리 사회의 진보 운동이 취해왔던 대응방식의 일관된 흐름 위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날 5.18민주화운동을 억울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기억하지만, 당시 희생되었던 각 개개인의 삶에 대한 기억이나 추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듯, 진보 운동에서 기억은 늘 전체적인 사건의 틀로서, 그리고 애도는 피해자 일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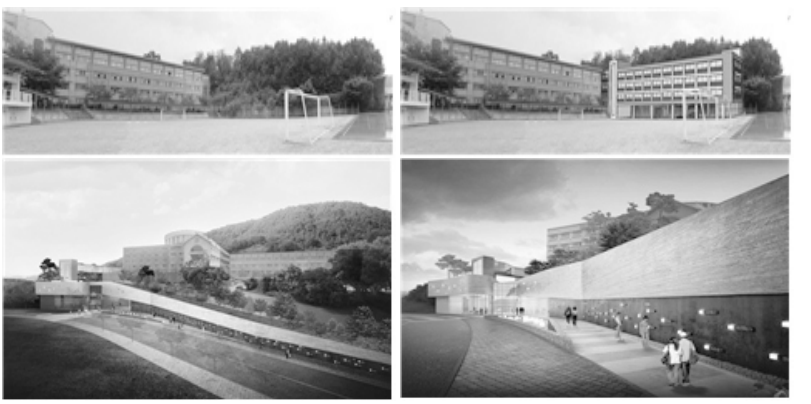
단원고 교실을 둘러싼 갈등의 잠정적 소강상태는 2015년 여름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단원고 운영위원회와 입장표명에 적극적이었던 재학생 학부모 일부는 2014년 11월의 학부모 총회의 결의를 근거로, 단원고 2학년 교실 정리를 계속 주장하였다. 그리고 2015년 7월 17일, 당시 1, 2학년 재학생 학부모 10여 명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단원고 2학년 교실의 유품들을 철수하도록 요청하며 본격적인 교실 존치반대 활동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인수위 때 구성한 단원고 특별위원회에게 단원고 2학년 교실 문제를 논의하도록 요청하였다. 단원고 특별위원회는 2015년 8월 26일, 9월 4일, 9월 16일,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단원고 학교운영위원장 장기(지역대표 운영위원)와 일부 교육청 간부들의 '교실 정리' 주장과 유가족 대표와 특위 전문가 위원들의 '교실 존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그런데, 과연 교육청이 당시에 교실 문제에 대해 진정 '해결'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당시 교육청이 단원고 특별위원회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방청에 참석한 100여 명의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들 간에 진흙탕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특위 회의는 교실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갔다기보다는 오히려 유가족과 재학생 부모 간의 극렬한 대립을 촉발하는 효과를 생성했다.

이 당시 주목할 대목은 단원고 특위의 전문가 위원이었던 명지대 김익한 교수의 발의로, 교실을 존치하여 희생된 아이들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기억하고 관계생성적 애도를 실천함과 동시에 이재정 교육감 등이 주장하는 담론적 애도로서의 교육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 안은 참사 당시 2학년 교실을 기념관으로 보존하면서도 신입생을 포함한 재학생의 교육공간을 확충하는 단원고 신축 제안으로, 2015년 9월 4일 단원고 특위 2차 회의에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에 의해 발표되었다(아래 〈그림 1〉 참조).

〈그림 1〉 교사 신축 전과 후의 모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당시 유가족의 생각은 이 자료에 실려있는 다음 문구를 통해 잘 드러난다.

> 교실은 단원고학생들과 안산시민들에게 고통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생성해내는 역사적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이곳은 입시교육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친구들과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갔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교실은 슬픈 기억과 추모를 넘어, 아이들의 꿈이 실현되고 행복이 이야기되는 희망과 실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4.16가족협의회 2015, 15).

위의 문구에서 볼 수 있듯, 유가족은 교실의 장소성을 "아이들이 친구들과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곳", "자신의 꿈을 키워갔던 공간"이라는 사실에서 발견하고 있었다. 즉, 교실을 존치해야 하는 이유는 개별 인격의 생동감 있는 삶에 대한 기억을 배태하고 있는, 교실이 갖는 장소적 의미에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장소성의 기억이야말로 "슬픈 기억과 추모를 넘어" "희망과 실천의 장소"로서의 장소성을 획득하는 관계생성적 애도의 길임을 말하고 있었다.

장소성이란 특정 장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의미하지만, 장소가 독자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그 장소에 머무는 사람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축적되는 것이다. 바슐라르는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들이 오랜 머무름[潛在]에

의해 구체화 된, 지속의 아름다운 화석들을 발견하는 것은, 공간에 의해서, 공간 가운데서"이며, "추억은 잘 공간화되어 있으면 그만큼 더 단단히 뿌리박아, 변함없이 있게" 된다(바슐라르 2003, 84). 결국, 장소성이란 무엇보다 내부에 있다는 느낌이며, 그 장소에 강하게 공감하는 일원으로서 자신이 그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다(렐프 2017, 150). 단원고 2학년 교실을 존치하여 기념공간으로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은 교실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 아이들의 추억이 잘 공간화되어 있는 그곳의 장소성을 살림으로써 집단의 기억을 "뿌리박아, 변함없이 있게" 하려는 시도였다.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 측의 갈등이 격화되자, 경기도교육청은 단원고 2학년 교실 존치 문제에 대해 유가족과 재학생 부모들이 '합의'하도록 요구하면서 논의 자리에서 빠지는 것을 선택했다. 일종의 '당사자주의'를 내세운 것인데, 이는 사회적 기억과 애도의 문제를 이익집단의 '합의 해결'의 차원으로 치부해버림으로써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형식적 합리주의로 환원해버리는 태도였다.

당사자주의를 내세워 유가족과 일부 재학생 학부모 간의 극한 대립을 내버려 둔 상황에서, 2015년 11월 경기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고 그곳에 단원고 2학년 교실을 복원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가칭)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계획(안)'(경기도교육청 2015/11/22)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경기도민이 세계 시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 생활을 영위하여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었다(경기도교육청 2015, 4). 또한 '4.16인권선언'을 통해 "주요한 인권 침해와 재난, 그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기억할 의무를 그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시민의 보편적 책임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그 교육적 실천의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경기도교육청 2015, 6).

문제는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및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비전이 앞서 소개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교실 존치의 과제 설정 방식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한다는 데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언뜻 보기에 교육혁신의 가치로서 의미 있어 보이지만, 교육청의 기획 속에서 세월호 참사와 희생된 아이들 하나하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데 의미 있게 활용되는 소재이거나, "시민의 보편적 책임성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위치 지어지고 있었다. 인격성의 기억론과 관계생성적 애도의 지향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민주적 과제'로 환원되어버린 것이다. 아도르노가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숱한 개별적 희생을 나치를 단죄하고 유럽의 민주화를 달성하는 과제로 환원시킨 것에 대해 비판했던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에서 개별 인격의 희생을 민주시민교육의 비전 속에 용해시켜 버리는 것을 선택했다(호르크하이머·아도르노 1995).

3. 교실 존치 운동과 '협약'에 의한 교실 이전

'진보 교육감'의 이러한 대응은 권력을 기반으로 한 구심력으로 작용하여 주변 세력을 점차 포섭하기 시작하였다. 본래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들의 교실 철거 주장은 기억을 삭제하고 애도를 끝냄으로써, 이른바 '정상 교육'이라는 일상으로 돌아가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이재정 교육감의 4.16민주시민교육원으로의 교실 이전 주장은 교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확보하는 대신, 새로운 '진보적 교육'으로서 '4.16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실 존치를 반대해 온 일부 학부모들의 학습권 주장은 교육감이 민주시민교육원을 건설하고 그곳으로 교실 문제를 이전하는 것에 의해 포괄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 문제는 그간 형성되어 온 인격성의 기억론과 관계생성적 애도의 움직임이 교육감의 비전과 선택 속에서 조금도 자리를 확보할 길이 없었다는 데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이 꾸준히 지속해 온 기억과 애도의 새로운 움직임은 '4.16민주시민교육'이라는 '진보적 과제'의 실천이라는 논리 속에서 조용히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를 느낀다. 과연 '4.16민주시민교육'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추구해야 하는 '진보적 과제'로서 가장 적절하고도 합당한 것이었을까?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침몰을 목격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듯이, 세월호 참사와 아이들의 죽음은 입시교육 위주의 교육체계와 '가만히 있으라'는 수동적 교육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기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요구하였다. 참사 이후 유가족은 무엇보다 구조 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동안 학교 교육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만 하고 있었던 자신들과 한국 사회에 대해서 통탄하였다. 안개가 그득히 낀 저녁에 굳이 왜 서둘러 배를 타야 했는지, 배의 침몰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교사들은 어른이자 책임자로서 학생들에게 어째서 지시와 도움을 주지 못했는지, 또 참사 이후 교사들의 전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반면 죽은 학생들과 유가족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하는 등, 학교와 교사들이 보여준 이기적이고도 무책임한 모습은 이 나라의 교육체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도 충분히 남았다. 그러나 '4.16민주시민교육'은 교육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보다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추가로 하겠다는 구상으로, 여기에는 입시교육 탈피와 현 교육체계의 근본적 변혁이라는 지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은 표면적으로는 보수적 경향성과 진보적 경향성을 각각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원고 2학년 교실에 대해서는 철거든 이전이든 결과적으로 장소의 이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귀결점으로 수렴되었다. 또한,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애도의 측면에서도 재학생 학부모나 경기도교육청 모두 유가족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꿈이 실현되고 행복이 이야기되는 희망과 실천"이라는 방향과는 달리 각 주체가 추구하는 '학습권' 확보 혹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이라는 '과제'의 해결로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유가족과 일부 시민들은 교실 존치 투쟁에

돌입하였다. 2015년 11월 가족협의회 소속의 4.16기억저장소가 실무주체가 되어 광주상주모임, 전교조 안산지부 등등을 포함한 '4.16교실지키기 시민모임'을 조직하고, 교실 존치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과 교육청 앞 피케팅 시위를 시작하였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2016년 4월 10일까지 약 5개월 동안,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겨우내 피케팅 시위를 지속하였다. 2016년 1월 8일에는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전교조, 4.16교실지키기 시민모임 공동으로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교실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19,065명이 서명한 '4.16교실지키기 서명지'를 도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하였다(중앙일보 2016/1/8). 약 2개월 동안 진행된 이 서명운동에는 4.16기억저장소가 2015년 4월부터 진행한 '기억과 약속의 길'에 참가한 100여 개 단체 3,000여 명과 '아이들의 방' 순회 전시에 참여한 지역단체가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이는 교실 존치 운동이 그간 축적되어 온 인격성의 기억론 및 관계생성적 애도의 실천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실 이전 결정에 실망한 유가족들은 2016년 1월 5일 성명서 '단원고 졸업식을 앞두고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이 제안한 명예 졸업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1월 10일, '세월호 304 잊지 않을게', '리멤버 0416' 등의 시민모임이 주도하여 단원고 2학년 교실에서 졸업식을 대신한 '방학식'을 가졌다. 유가족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방학식에서는 희생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방학식은 교실 존치를 위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노력이 인격성의 기억론과 관계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성적 애도의 실천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잘 드러내는 행사였다. 희생 학생들의 명예 졸업식은 결국 3년이 지난 2019년 1월에야 치러질 수 있었는데, 이때에도 250명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사진과 함께 호명되었다.

교실 존치 운동이 본격화되고 그 사회적 확산이 진행되던 같은 시기에, 경기도교육청은 단원고 학교운영위원장,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과 함께 협의 회의를 지속하여 단원고 2학년 교실을 안산교육지원청 별관 자리로 임시 이전하고, 4.16민주시민교육원이 건립되면 그곳에 교실을 복원한다는 안에 합의하도록 종용하였다. 당사자주의를 내세워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 간의 극한 대립 및 존치 운동과 반대 운동의 대립을 초래했던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2월 28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중재에 의한 합의 도출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유교·천주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으로 이뤄진 한국 종교계의 공식 협력기구이다. 유가족은 이재정 교육감이 성공회 신부라는 점과 교육청에서 교실 문제 협의에 나섰던 김거성 감사관이 개신교 목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활용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였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종교계의 '중재'를 경기도교육청이 낸 "신의 한 수"라고 칭하기도 했다(경기일보 2016/2/29).

2016년 3월 8일 종교계의 '중재'에 의한 3차 협의 회의에서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들은 2016년 4월 16일 이전에 2학년 교실을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임시 이전하고, 2019년 단원고 인근 시유지에 세월호 추모와 교육공간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하여 교실을 복원하기로 합

의하였다. 이재정 교육감이 종교계의 인사이듯 "종교계의 중재가 결국 교육청의 입장을 관철하는 매개가 아니겠는가"는 사전의 우려를 그대로 드러낸 결과였다. 단원고 인근 시유지는 단원고 정문과 원고잔공원 사이의 도로 위치로, 이곳에 교육원을 건립하고 현 도로는 교육원 바깥쪽으로 새로 건설한다는 안이었다. 단원고 인근 부지라는 점에서, 이는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단원고 2학년 교실이 갖는 장소성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였다. 물론 단원고 '인근'에 교실을 복원한다고 하여 훼손된 장소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래의 공간 위치와의 거리가 장소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가의 여부를 정하는 결정변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된 도언 엄마의 '학교'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시민의 감동 어린 고백에서, 단원고 2학년 교실이 갖는 장소성은 어디까지나 그곳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곳"이자 "자신의 꿈을 키워갔던 공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단원고 '인근'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한다는 안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중재에 힘입어 구심력을 발휘하기는 했지만, 이후 안산시에서 시유지를 제공하는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결국 단원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장소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담론적 과제의 실행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로써, 결국 재학생 학부모들이 기억을 지우고 교실을 철거하려는 보수적 움직임에 이재정 교육감의 '진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담론적' 대안은 점차 흡수되어가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유가족은 자녀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교실이 점차 더 원래 공간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점차 배제되고 소외되는 감정적 경험을 하였다.

> 그렇게 해서 책상만 떨렁 좋은 건물에, 새 건물에 갖다 놨[놓]으면 뭐해요. 아이들이 지냈던 그 자리 그대로 저는 그게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시험 감독 가면은요, 남자 아이들 있는 교실을 가면은요, 그 남자 아이들의 그 특유의 호르몬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요. 여학생들 가면 또 틀리구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잠깐 가서 이렇게 보면, 시험 끝나갖고 친구들끼리 도란도란 모여갖고 앉아있는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책상 걸터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막 화장실 가면 복도 뛰어다니는 그런 게 다 지금도 그걸 모형 그대로 해놓으라고 하면은 저는 마네킹 갖다가 그렇게 다 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기억이 저는 있는데 그 자리를 다 없애고 그 새 건물 지은 데다가 딱 책상만 갖다 놓는데 그거는 아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기억저장소 편 2019b, 218).[7]

우리는 이 과정에서 안산지역의 시민단체가 어떤 대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산지역 시민단체의 교실 존치 문제에 관한

7) 은인숙, 2015년 12월 4일 구술 내용이다.

입장이 공식 표명된 것은 2015년 10월 13일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였다.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라는 교육감의 입장은 결국 당사자들 간의 싸움을 통한 문제 해결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재학생 학부모들이 유가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하고 참사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이웃이라는 점을 볼 때 지역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교육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있을 때 교실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단원고는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이며 안산 공동체는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뉴시스 2015/10/13). 이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아 알 수 있듯, 안산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유가족들과 일부 시민들의 교실 존치 운동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대신 안산시민들의 교실 문제를 둘러싼 대립 길항이 악화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의 해결 방안으로 이재정 교육감 등 교육행정 쪽에서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을 주문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안산지역의 시민단체가 오랜 기간 쌓아온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생성적 애도의 실천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재정 교육감의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을 통한 담론적 애도의 실행 의지가 유가족들의 관계생성적 애도의 실천 의지와 충돌했던 것처럼, 안산지역의 사회 운동적 가치 지향이 유가족들의 교실 존치를 향한 염원과 충돌했다. 결국, 안산지역 시민단체가 요구한 대로 이재정 교육감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를 통해 단원고 2학년 교실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이전과 4.16민주시민교육원의 건립이라는 자신의 아젠다를 강력하게 관철하였다.

이미 한국 사회에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듯이,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 국가와 사회 시스템은 물론 윤리관, 심지어는 시민사회운동의 자기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김익한 2014; 지주형 2014; 박명림 2015; 이병천·박태현 2015; 안병우 2015; 하상복 2015; 김종엽 외 2016; 이재열 외 2016; 이현정 2016). 그러나 참사의 피해자인 유가족들이 원하는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시민사회 운동은 그 '진보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 착근한 운동으로 발전해갈 수 없는 것임을 말해준다.

2016년 3월 8일의 합의 이후 합의 실행을 위한 협의 회의가 진행된 뒤 최종적으로 5월 9일에 단원고 교실 이전을 포함한 사회적 협약의 내용을 선포하는 협약식이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제종길 안산시장, 노선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광윤 단원고 교장이 합의하여 만들어진 협약문이 발표되었는데, 협약문에는 4.16안전교육시설의 건립 및 운영, 단원고 교육정상화 및 안산교육 발전, 단원고 내 기억공간 조성, 단원고 학교운영 참여협의체 구성, 기억교실의 한시적 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협약식은 경기도교육청이나 단원고, 그리고 재학생 학부모들이 유가족이 추구해왔던 기억과 애도의 방식을 거부하고 이루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유가족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협약식 당일 바로 현실화된다. 협약식이 진행된 직후 단원

고를 방문하여 우연히 학적부를 떼어본 일부 유가족은 단원고가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학적을 이미 '제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실을 빼앗긴다는 좋지 못한 마음에 아이들까지 '제적처리' 되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힌 유가족은 단원고 교실 입구 현관에서 제적처리 철회와 교실 존치를 다시 요구하며 5일간 농성을 진행하였다.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 그리고 재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를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수용했던 유가족들은 제적처리 사건을 통해 그간의 '학습권' 주장이나 '민주시민교육'의 주장들의 배후에는 기억을 '삭제'하고 과거의 질서로 돌아가려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 속에는 진보를 내세우든 보수를 내세우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애도의 문제에 직면해서는 개별 인격에 대한 관계생성적 애도를 거절하고, 기억을 '삭제'하더라도 자신들의 아젠다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려는 것이 현실 정치의 실체라는 자각도 포함되어 있었다. 상황 설명을 위해 단원고 농성장에 왔던 이재정 교육감에게 한 유가족이 "아니, 진보 교육감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되냐?"고 질문하자 이 교육감은 "나는 진보 교육감이 아니다", "[나는] 그냥 교육감이다"라고 답변한 장면은 유가족이 그러한 깨달음에 이르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기억저장소 편 2019a, 140).[8] 그리고 이로써 유가족들은 보수적 권력, 보수적 시민사회와 결별함과 동시에 진보적 권력과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그것을 상대화하여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8) 이남석, 2019년 2월 26일 구술 내용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
www.kdemo.or.kr

2016년 5월의 처절한 현장 상황의 진행은 그간의 주체 간 의미경합의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유가족, 4.16교실지키기 시민모임 등의 일부 시민사회 주체들, 안산 시민운동계, '진보 정치인'으로서의 이재정과 경기도교육청, 단원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4.16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운동계, 그리고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들은 각각 서로 다른 의미로서 경합에 참여하였으며 복잡한 현실 상황을 만들어갔다. 정리하자면, 2014년 말까지만 해도 참사 직후라는 상황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유가족과 시민사회, 심지어는 경기도교육청까지도 아이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려는 노력과 관계생성적 애도의 지향에 이끌려 갔다. 2014년 말에 이재정 교육감이 아이들의 명예 졸업까지 교실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 등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였다.

그러다가 2015년이 되면서 재학생 학부모들의 '학습권' 주장과 단원고의 교육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이 표출되기 시작하자,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정치적 판단' 속에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이라는 담론적 아젠다를 내세우게 되었고,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세 주체는 모두 단원고 2학년 교실의 철거 혹은 이전이라는 입장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동일성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수의 재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안산 시민운동계와 '진보적' 시민운동계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유가족과 4.16교실지키기 시민모임의 교실 존치의 움직임은 현실 결정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국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중재'가 '신의 한 수'로 작동하면서, 겨우내 피케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

격성의 기억론과 관계생성적 애도를 지향했던 교실 존치의 움직임은 힘을 상실하고 말았다. 단원고의 행정편의주의적 제적처리와 이재정 교육감의 '진보 교육감이 아니다'는 발언은 이미 기억 삭제와 자신들의 아젠다 실현이 거스를 수 없는 현실적 힘이었음을 상징하고 있었다. 1주일간의 농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가 제적처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발 물러서자, 유가족은 교실을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임시 이전하고 '4.16민주시민교육원'에 교실을 복원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주장을 결국 수용하였다. 현실적 힘의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후의 전개 양상은 재학생 학부모든 경기도교육청이든 단원고든, 사실상의 목적과 목표가 단원고 2학년 교실을 철거하는 데 있었음을 보여준다. 2016년 5월 9일의 협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단원고와 원고잔공원 사이의 부지 제공이 쉽지 않다는 주장을 제출하였고, '현실성'을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을 안산교육지원청 자리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유가족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20일 단원고 2학년 교실의 철거와 안산교육지원청 강당으로의 이전이 강행되었다. 이미 철거의 구심력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4.16가족협의회는 강행에 동의하고, 이전 전날의 기억식과 당일의 이전식에서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교실의 장소성이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강행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이나 단원고는 기억식과 이전식에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여함으로써 유가족들을 '달래려' 하였지만, 사실상 기억식과 이전식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오히려 유가족들의 상실감을 배가하는 역할을 하였다. 교육청은 이전하는 아이들의 책걸상과 유품을 무진동차가 아닌 일반 이삿짐 차량으로 이송하였고, 안산교육지원청 강당에 수납된 아이들의 흔적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정리할 예산은 단 1원도 책정하지 않았다.

4. 4.16기억교실과 유가족의 외로운 기억 투쟁

단원고 2학년 교실이 철거되고 아이들의 책걸상, 유품, 친구들과 시민들의 메시지 등이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이송되면서 교실을 둘러싼 주체들의 움직임은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유가족과 일부 시민을 제외한 각 집단은 모두 목표한 바를 달성한 듯이 보였다. 재학생 학부모들은 단원고 2학년 교실을 입시교육이 진행되는 예전의 공간으로 돌려놓아 '학습권 보장'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이라는 목표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4.16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계는 교실을 둘러싼 '혼란'을 정리하고 진상규명 투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안산시민운동계는 안산시민들 간의 분열 상황을 종식할 수 있었다. 집단 이익을 추구했든, 담론적 지향을 추구했든, 시민사회의 통합성을 추구했든, 교실 철거와 이전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오로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실패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는 인격성의 기억론과 관계생성적 애도를 이뤄내려 안간힘을 썼던 유가족과 일부 시민운동가들뿐이었다.

한동안의 소강상태를 깨고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갔던 것은 유가족과 4.16기억저장소였다. 특히 '아이들의 방 전시', '기억과 약속의 길', 유가족 개인별 '구술녹취사업' 등을 실천해왔던 4.16기억저장소는 교실 이전 이후의 실무를 떠맡아, 교실 존치의 실패 상황 속에서라도 인격성의 기억론과 관계생성적 애도의 지향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이들의 고군분투는 비록 교실 존치에 실패함으로써 아이들 하나하나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소는 상실하고 말았지만 안산교육지청별관으로 이전한 교실에서라도 그 장소성을 되살려보려는 안간힘이었다. 2016년 7월, 4.16기억저장소 소장으로 취임한 고 김도언의 엄마 이지성과 운영위원으로 새로 참여한 10여 명의 유가족은 9월부터 안산교육지원청 별관 1, 2층 공간에 교실을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 교실을 딱 들어갔는데 저는… 아… 단원고에 있을 때와 느낌이, 마음이 달라요. 저기는 일단 재학생들이 막 웃는 웃음소리와 교육 끝나는 종, 알림 소리 등등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없지만 그래도 살아 있는 공간이거든요. 살아 있는 공간, 아이들은 없지만 살아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딱 왔는데, 죽어있는 공간이 된 거죠. 창고처럼 죽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냥 창고에요, 창고. 탁 느낌이, 딱 반별로 교실이 되어 있고, 문짝을 딱 열면, 창고에요, 창고. 애들을 처박아 뒀구나. 얘들은 우리와는 의미가 다르구나.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책걸상인데,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얘들은 그냥 쓸모없는 책걸상을 처박아 뒀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공간이 죽어있지만, 시간은 멈춰져 있지만, 살아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더 막 움직였던 거였어요.[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이지성 소장의 지휘 아래, 유가족 운영위원들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인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공간의 협소함, 이송과정에서의 일부 훼손, 예산 결핍이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손수 청소를 하고, 유품들을 하나하나 닦고, 책걸상을 배치하고, 칠판을 다시 걸고, 입구와 복도에 '기억의 나무'와 아이들의 사진 등을 거는 작업을 발 벗고 나서서 진행하였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은 눈물겨운 3개월여의 투쟁이었다. 그 결과 2016년 11월 21일, 아이들의 교실은 '4.16기억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유가족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유가족은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새로 만들어진 교실을 '4.16기억교실'이라 이름 지었는데, 이 이름은 적어도 두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4.16기억교실'이 실제의 교실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실'이라는 점이다. 장소성은 공간이 주는 아우라와 공간에 참여하는 주체의 기억 공유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원고 2학년 교실은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상상, 참사로 정지해버린 교실의 기억, 희생자의 책걸상에서 이뤄진 관계생성적 애도 실천에 대한 감정들이 응축되어 그 어떤 곳보다 강한 장소성을 지닌 곳이었다. '기술복제 시대'에 사진의 사본들이 본래의 아우라를 상실하는 것처럼, 단원고 2학년 교실의 이전은 그 자체로 아우라의 상실과 기억의 삭제를 강요하였다(벤야민 2007). 안산교육지청별관으로 어쩔 수 없이 교실 이전을 받아들여야 했던 유가족은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비록 아이들은 다시 돌아

9) 4.16기억저장소 소장 이지성, 2019년 9월 19일 면담 내용 일부이다.

올 수 없지만, 4.16기억교실은 언젠가 다시 본래의 교실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꿈꾸며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장소'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다른 하나는 '4.16기억교실'이 '4.16을 기억하게 하는 교실'이라는 것이다. 비록 장소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4.16기억교실에서의 기억은 일정 정도 4.16사건 전체에 대한 추상적 기억으로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4.16기억교실'이라는 명칭의 함의는 4.16사건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 재학생 학부형들과 교육청, 단원고에 의해 박탈당한 개별 인격성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유가족이 4.16기억교실에 단원고 2학년 교실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장소성의 새로운 생성을 조금이라도 이뤄보려는 시도였다. 유가족은 장소성의 새로운 생성을 통해 4.16을 기억하게 하는 공간으로서 4.16기억교실이 존재하기를 바라며, 아쉬움 속에서도 그 안에서 인격성의 기억론과 관계생성적 애도의 실천을 지속시키고자 했다.

4.16기억저장소가 기억교실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자임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아카이브기관으로서 4.16기억저장소의 그간의 활동들이 개별 인격성의 기억을 소환하고 관계생성적 애도를 실천해온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4.16가족협의회와 시민운동계가 진상규명 활동과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적 투쟁에 집중할 때, 4.16기억저장소는 그러한 활동들에 동참하고 지원하는 일 외에도 기억과 관련된 실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이지성 소장과 10여 명의 유가족 운영위원들이 자신의 아이를 포함한 희생된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기억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염원한 사람들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16기억저장소의 홈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이지 첫 화면이 단원고 2학년 1반에서 10반까지의 희생된 아이들 이름을 호명하고 있음은 바로 인격성의 기억론이라는 조직의 지향을 상징하는 것이다.

4.16기억저장소의 유가족 운영위원들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인격적 기억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획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2015년 6월부터 장장 3년 반 동안 진행된 세월호 피해자 구술기록 사업, 2017년 기억육필시 전시사업, 2018년 부모들의 편지글을 모아서 편찬한 『그리운 너에게』 출간 사업은 모두 인격성의 기억론을 실천한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17년 9월부터 진행된 4.16기억교실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16 기억과 약속: 걸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4.16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진행되었던 '기억과 약속의 길'에서 착안하여 만든 것으로, 강의와 기억의 장소들을 걷는 방식을 결합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단원고 2학년 각 반의 아이들의 기억들을 들추어내고, 특히 10-20명의 희생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구체적인 삶과 학교에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이들의 삶과 꿈에 대해 생각해보고, 단원고 2학년 교실이 4.16기억교실로 이전되게 된 과정을 되새기며, 개별 인격에 대한 기억과 자기 성찰과 실천의 문제에 대해 강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노래, 시, 구연동화, 만화 등을 감상하고 참여자 각자의 4.16의 기억을 스스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4.16기억교실 시민프로그램은

4.16기억전시관, 단원고 앞, 화정천 등 아이들이 걸었던 길, 정부합동분향소, 그리고 4.16기억교실로 이어지는 '기억과 약속의 길'을 걸으며 마무리된다.

4.16기억저장소의 시민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4.16기억교실 방문자들에 대한 교실 안내는 모두 4.16기억저장소의 유가족 운영위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2017년 1년간만 해도 총 153회의 단체 예약 방문자 4,921명, 개인 방문자 9,468명에게 유가족은 각 교실을 돌며 아이들의 삶에 대한 기억을 회상시키는 일을 담당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들 유가족 운영위원들은 교실 이전의 역사와 투쟁 실패의 슬픔을 안고, 잃어버린 장소성을 채우고 아이들의 개별 인격으로서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기억교실을 지키고 있다.

5. 나가며: 새로운 장소성의 생성을 위하여

단원고 2학년 교실을 둘러싼 여러 주체의 행위와 지식의 각축은 우리 사회가 갖는 진영 간 대립, 이익을 향한 집단적 이기심의 표면화, 담론적 과제를 집중하는 운동 경향, 고통받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 대한 망각 등의 여러 가지 불편하고도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 왔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 한 사람 한 사람 희생자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이를 통해 오늘날 살아가는 이들과 새로운 관계생성을 만들어나갔던 모습은 아쉽게도 점차 국가와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그러나 유가족과 일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시민은 본래의 장소에서 떨어져나온 만큼 더욱더 4.16기억교실을 안타깝고 소중히 여기며, 이곳에서 인격성의 기억론과 관계생성적 애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제 4.16기억교실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앞두고 있다.

2018년 8월 13일, 경기도교육청과 4.16기억저장소의 합의로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있던 4.16기억교실이 당분간 본관으로 이전하고 별관 자리에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4.16기억교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4.16기억저장소가 그동안 4.16기억교실을 관리·운영해온 만큼 새로운 재구성 작업을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작은 결정들조차 예산집행의 주무부처인 경기도교육청과 협의 속에 추진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교육지원청의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4.16민주시민교육원의 공간으로 하고, 별관 자리에 4.16기억교실을 신축하는 것을 기본안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건설될 4.16기억교실이 어떠한 장소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새롭게 건설될 4.16기억교실은 그동안 힘들고 외롭게 유가족이 투쟁해 온 인격성의 기억론과 관계생성적 애도를 진정성 있게 배태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롭게 별관에 건설될 4.16기억교실도 원래의 교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연의 아우라를 불러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만일 인격성의 기억론과 관계생성적 애도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가 십분 공감한다면 함께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로서는 2021년 기억교실 완공 이후에 대한 상상력이 중요하다. 장소성은 공간 그 자체가 본연적으로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머무는 사람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축적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야민이 지적하듯, 복제된 사물은 본래의 아우라를 상실할 수밖에 없기에, 그것이 만일 본래의 장소를 떠난 뒤에도 아우라를 갖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성의 예술적인 생성이 필요하다(벤야민 2007).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예술적 시도들과 관계구축의 가능성 속에서 인격성의 기억론과 관계생성적 애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4.16기억교실을 새롭게 건설할 수 있을까?

먼저, 아우라 상실의 극복은 우선 아이들 하나하나의 지난 삶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현하고, 이것들을 교실 안에 예술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소성의 새로운 생성의 시도는 반드시 단원고 2학년 교실과 치수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재현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 또한, 새로우면서도 열린 방문객과의 소통의 방법들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 방문객이 기억교실을 통해 경험하는 마음의 '울림'과 애도적 실천은 다시 기억교실이 배태하는 기억의 내용으로서 축적되고, 이 공간을 더욱더 살아 숨쉬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실과 복도를 가르는 벽을 강화유리로 처리하여 복도에서도 교실이 훤히 보이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복도에 앉아 유리를 통해 보이는 교실을 보며 아이들에 대한 기억과 자신의 마음, 생각의 변화를 그림이나 만화나 시로 표현하고 그 기록물들이 다시 교실의 구성물이 되어간다면, 마치 아우라를 상실한 사진들이 모여 영화가 되고 그 영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의 서사와 종합 속에서 새로운 아우라가 생성되는 것처럼, 4.16기억교실도 새로운 장소성을 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어디까지나 오랜 기간 기억교실을 관찰했던 사람으로서의 안타까운 제언에 불과하다. 앞으로 전개될 4.16기억교실의 복원 과정은 장소성의 새로운 생성의 면에서 많은 연구와 전문가들의 제안적 참여, 그리고 기억교실의 방문과 관계생성적 애도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4.16가족협의회. 2015. '단원고 교사증축과 2학년 교실 증축 방안.' 2015년 9월 4일 단원고특별위원회 2차 회의 발표자료.

4.16기억저장소 편. 2019a.『그날을 말하다: 창현 아빠 이남석』, 파주: 한울.

_____. 2019b.『그날을 말하다: 승묵 엄마 은인숙』, 파주: 한울.

_____. 2019c.『그날을 말하다: 예은 엄마 박은희』, 파주: 한울.

경기도교육청. 2015. (가칭)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계획(안). 2015년 11월 22일 파워포인트 자료. 4.

김익한. 2014. "'세월호 기억 저장소'를 만들자."『역사비평』107. 12-24.

김종엽 외. 2016.『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서울: 그린비.

렐프, E. C. 2017.『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바슐라르, 가스통. 2003.『공간의 시학』. 서울: 동문선.

박명림. 2015. "세월호 정치의 표층과 심부."『역사비평』110. 8-36.

벤야민, 발터. 2007.『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서울: 길.

서희정·이재규. 2017. “기념공간에서의 집단기억특성과 공간연출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2(4). 156-168.
심영섭. 2018. “집단적 기억과 기억공간: 에쉐데와 엔쉐데 그리고 세월호.”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6(3). 177-199.
아스만, 알라이다. 2011.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서울: 그린비.
안병우. 2015. “세월호 사건 기록화의 과정과 의의.” 『기록학연구』 44. 217-241.
이병천·박태현. 2015. “세월호 참사, 국가를 묻다: 불량 국가의 정치경제.” 『기억과 전망』 33. 347-379.
이재열 외. 2016.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 서울: 오름.
이현정. 2016. “세월호 참사와 사회적 고통: 표상, 경험, 개입에 관하여.” 『보건과 사회과학』 43(1). 63-83.
지주형. 2015. “세월호 참사의 정치사회학: 신자유주의의 환상과 현실.” 『경제와 사회』 104. 14-55.
태지호. 2014. 『기억 문화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하상복. 2015. “세월호 참사와 한국 사회: 루소의 정치적 상상력과 희망의 길.” 『기억과 전망』 32. 136-167.
호르크하이머, M·Th. W. 아도르노. 1995. 『계몽의 변증법』. 서울: 문예출판사.

Halbwachs, Maurice. 1992. *On Collective Memory*. Lewis A. Coser. ed. and tra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미디어자료

경기일보. 2016/2/29. “기억교실 갈등 푸나, 신의 한 수 관심집중.”
뉴시스. 2015/10/13. “안산세월호대책위 “단원고 교실문제 교육감이 해결하라”.”
중앙일보. 2016/1/8. ““아이들을 박제화하지 말아주세요” 단원고 교실 존치 기자회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Abstract

The Struggle Surrounding the 4.16 Classrooms and the Construction of a New Placeness

Beyond the Memory of Victimhood, Toward the Memory of Personalities

Lee, Hyeon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xts and dynamics of the struggles surrounding the classrooms formerly occupied by the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to discuss the contest of meanings and the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memory theory. Since November 2014, the bereaved families and Danwon High School have been in sharp opposition over the classrooms of the then-second-years, which had been occupied by the student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retained as a place of remembrance after the tragic accident. From the summer of 2015, the conflict over the classrooms became increasingly severe and diversified as several parents of Danwon High School's current students began to voice the request to make the classrooms available for use. In the face of the deepening conflict, the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which had been taking an ambivalent position on the subject, sought to resolve the situation, and under the mediation of the Korean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an agreement was reached to transfer the classroom to the annex of the Ansan Office of Education. The fight over the retention of the classrooms of the Sewol ferry victims at

Danwon High School not only demonstrates the contest of meanings endowed on the classrooms by different groups but also shows how ‘progressive’ practices involving various actors become politicized in a unique way in Korean society today. The media described the conflict as a clash between two opposing sides, that is, between those who demand the preservation of the classrooms and those who demand their removal. However, field observations conducted over five years from 2014 to 2019 revealed that the conflict over the classrooms unraveled in more complex forms than can be described using a dichotomous framework. This study examines the mutual dynamics of the various actors surrounding the classrooms, including Danwon High School, parents of current students, the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and the bereaved parents, based on participant observations, on-site interviews, and published oral records. Through this examin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process through which the classrooms of the victims retained at Danwon High School was relocated and transformed into the 4.16 Memory Classroom, eliminated of their placeness and the nature of this relocation. Conclusively, this study suggests the prospects of the 4.16 Memory Classroom and the possibilities of constructing a new placeness for mourning and remembrance.

■ Keywords: 4.16 Memory Classroom, Sewol Ferry Disaster, 4.16 Memory Archive, Memory of Personalities, Placeness

투고 : 2019/09/30 심사 : 2019/10/16 확정 : 2019/11/08